

구동에서



김종민 논설실장

5·18 광주는 언제쯤 평안할까

5·18민주화운동 43주년,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 맞춰 원 포인트 개헌을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아직 실낱 같은 희망은 남은 게다.

올해는 오월단체와 시민단체 간 갈등과 분열이 일기도 했다. 파행으로 기념행사가 마무리됐지만 수개월째 진정된 화해 움직임은 없다. 공법단체인 부상자회·공로자회가 특전사동지회와 손잡고 지난 2월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진행한데서 비롯됐다. 시민들의 피로감은 더해가고 있다.

'사람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한평생 싸우자던 뜨거운 맹세...'를 위한 행진곡을 재차 부른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즉각 공론의 장을 만들기를 바란다. 각기 생각이 다를 뿐, 틀린 것은 아니다.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데,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다. 역사 왜곡은 끝을 모른다. 국가 사업으로 진상조사가 한창인데도 발표자 및 실종자 찾기 등 진실은 여전히 묻혀 있다. 반세기 가깝게 수십년이 흘렀으나 광주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과연 광주는 언제쯤 평안할까.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귀중한 자산이

다.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국민 저항으로 평가되는 1987년 6·10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 학살은 당시만 해도 유언비어로 날조되는 현실이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제작·배포한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사진첩과 광주 비디오 영상이 잔인한 폭력성을 울곧이 전하는 기록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6월항쟁은 200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시민들의 용기로 정취한 민주주의다. 자랑스런 역사다. 전 인류가 억압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표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여 유엔이 지정하는 '세계 군사주의와 권위주의 방지의 날'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5·18기념재단 창립 30주년을 2024년 UN 발의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인 2025년부터 공식 기념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논의로만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역사와 그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지는 것, 반대할 구실이 굳이 없는데도 말이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면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셈법도 다르다. 현재 로선 5월18일 지구촌이 기리는 세계 군사·권위주의 방지의 날 제정도 마찬가지다. 2030년 5·18민주화운동 50주년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강기정 시장은 최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도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위한 지지와 연대를 요청했다. 미완의 진실 규명을 앞당기고 명실상부 전국화·세계화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내고, 반드시 정취해야 하는 숙원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콘텐츠로 정립될 수 있다. 광주의 미래 발전을 약속하는 과업이다.

신록이 푸르른 날의 연속이다. 5·18이 광주다. 광주가 5·18이다. 5·18 광주공동체를 되살려야 한다.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라라/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라라'.

社說

동일생활권 목포-남악 택시 영업권 분쟁 이젠 끝내자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구역사업 면허로 구분돼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영업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4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목포시와 인접한 무안군 남악신도시 주민들은 상당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 동일 생활권 역으로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목포에서 남악으로 가는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가 빈번한 때문이다. 목포 택시들은 사업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빈 차로 돌아와야 해 손실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무안 택시들은 사업구역 통합에 반대한다. 노론자인 남악에서 1천500대의 목포 택시가 영업하면 137대의 이익을 뺏겨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입장이다.

도청이 남악신도시로 이전한지 17년 만에 목포와 무안 택시 사업구역 통합에 청신호가 켜졌다. 민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남도가 목포 전체와 오룡지구를 포함한 부분 통합안을 제시한 것이다. 목포 택시는 남악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무안 택시 또한 목포 전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흔히 하는 말로 상생이다. 그동안 전남도

와 목포시, 무안군은 수직차레 통합 시도를 했으나 사업구역 통합 범위, 면허 총량제에 대한 의견 충돌로 타협에 이르지 못했다. 고소·고발 등 지역·종사자 간 갈등과 행정 처분 등 부작용도 속출했었다.

7월께 양 시·군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될 찬반 투표를 통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무엇보다 이용자의 해묵은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다. 오룡지구의 택시 부족도 탈게 된다. 전남도는 사업구역 통합 합의가 조속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겠다.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도비 6억5천만원을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했고, 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돕고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니, 반가운 일이다.

불필요한 영업권 분쟁이 지속돼왔다. 너무 오래 끌었다. 진즉 풀어야 할 사안이다. 현실적으로 생활권이 같은 지역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목포-남악 택시 사업구역 통합안을 환영한다.

광주는 랜드마크가 부족하다는 외국·외지인 평가

광주를 떠올리면 딱히 즐거거리, 볼거리가 없다고 한다. 아시아문화수도도 지향하고 있지만 실상 관광도시로서 취약한 것이다.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광주시가 마련한 '광주의 맛·맛·의'라는 주제의 정책소품에 참여한 외국인과 외지인들은 광주의 이미지로 5·18민주화운동과 금남로로 상징되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무등산, 맛있는 음식을 꼽았다.

이들은 "정기 많고, 친절할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라면서도 랜드마크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가족·친구가 광주를 찾았을 때 소개할 체험 공간, 복합쇼핑몰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맛의 본고장이면서 요리가 훌륭한 식당에 부여하는 미슐랭 조차 없거나, 장기간 머물 숙소나 랜드마크로 여겨질 만한 관광지 부재를 꼽았다. 한글만 있는 음식점 메뉴판·행사 포스터, 관광지·관광공사 방문 시 영어 설명도 개선사항으로 진단했다.

광주와 전라도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 홍보대사이자 관광자원이 될 외국·외지인이 많지만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정책소품

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정책소품은 외국인·외지인의 시선에서 광주를 성찰해보는 유익한 기회였다.

광주는 대중교통 등 전반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외국인에 큰 편견이 없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인권·평화의 도시답게 다름은 있어도 차별은 없는 모두가 살기 좋은 포용행정에 적극 힘쓰는 결과다. 하지만 광주는 의외로 냉혹한 평가를 받았다. 사실 그동안 드러난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선 8기 1년을 모멘텀 삼아 새로운 광주로 거듭났으면 한다.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과 외지인들의 제안을 새길 바란다. 요즘 트렌드인 스토리텔링 등으로 신재한 문화·관광·역사자원을 널리 알려야 한다. 시민은 물론 방문객이 누릴 수 있는 체류 즐거거리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여 해선 안 된다. 정 많고 친절할 광주다.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의 도약을 기대해왔다.

하숙자의 '작은 학교이야기'



고흥점임중양중학교교장

생태텃밭의 경험이 행복사회의 동력 될 터

푸른 색이 요동친다. 생태 텃밭을 가꾼 지 벌써 4개월, 선생님들과 아이들은 열심히 가꿨다. 과연 지리날과 싶었지만 어느 사이 속속 크더니 무성해졌다. 필자가 심은 감자는 꽃이 피고 지더니 어느 곁에 다 자랐다. 급기야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잎과 줄기가 땅에 누워졌다. 사람이건 식물이건 농사는 '기다림'인가 보다. 급세 케고 싶었으나 토실토 싹해 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며칠 전, 작은 학교 살리기 공청회에 참석했다. 공청회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 지역 소멸의 위기 앞에서 지역 학교를 살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송형근 전남도교육위원 발의로 추진됐다. 작은 학교의 학교별 특색교육과정을 지원하고 2학기에 교과별 인근학교 간 공동수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고등교육지원청의 계획이다. 공동수업은 생각을 나누고 협업을 통한 사회성을 길러내기 위해서 적정수의 학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작은 학교의 문제는 인구급감 시대의 문제이기도 아이 키우기의 패러다임의 전환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지자체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학계 측은 주장한다. 특히 인구소

멸지역에서는 특별법으로 이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덧붙인다. 필자 또한 본 칼럼을 통해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국가시스템을 제안할 적이 있어 매우 반가웠다. 인구 유입의 성공 사례로 상주군의 마을공동체조합 대표의 발제가 인상적이었다. 상주군의 모 중학교가 대안학교로 전환하면서 타 지역 주민이 이주했다. 이주가족들이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뤄 지금은 협동조합으로 경제공동체가 됐다. 이는 지역 주민이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인다는 사례 발표였다. 학교와 마을이 공동체를 이뤄 마을과 학교를 살려낸 것이다.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 문제는 저출산과 도시·농산어촌의 인구 비대칭이 원인이다. 따라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는 학교간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지자체·마을(면)공동체·학교가 공동의 노력을 하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국가는 보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자체는 단기간 인구 유입책에서 벗어나 마을의 가치에 대해 향촌한 젊은이가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어야 한다. 주거·일자리·의료·교육·문화 등을 향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또 마을(면)은 학교를 포함한 지역공동체와 마을(면)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른 비전을 수립하고 마을의 특성을 담아낸 교육과 경제 공동체를 꾸려야 한다.

한참 열기가 달아오른 공청회장을 뒤로 하

고 학부모모임이 열리고 있는 우리 학교로 발길을 돌렸다. 어느 젊은 부부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다"고 털어놓는다. 우리 모두 격한 웃음으로 동감을 표했다. 농번기철이라 많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공통 관심사인 '어떻게 하면 자녀와, 가족, 그리고 주변세계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놓고 오랫동안 갑론을박했다.

그러던 중 밭에 심었던 농작물을 수확하여 참가시나무 아래서 잔치를 한다는 기별이 왔다. 이른바 '삼겹살 데이'란다. 선생님들과 아이들 모두 생명의 소중함, 공동체 정신을 배웠을 것이다. 상추며 썩갠 오이 등이 수북하다.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씹을 씹어 웃음을 피우고 있었다. 모두가 생산자로서 또 소비자로서 4개월간 소중한 체험활동의 터널을 통과했던 것이다.

우리는 노동과 생산, 소비가 분리된, 거대 자본 중심 사회에서 살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고 말았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텃밭에서 했던 것처럼 놀이가 공부와 되고 그것이 삶이 되는 사회를 희망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직업이 되고 그 노동으로 온전히 자아가 충만되는 삶, 그게 행복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공청회에서 내내 학부모들이 고민했던 문제가 바로 그게 아니고 무엇일까. 빨리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생태텃밭의 경험은 우리의 당면 고민을 풀어줄 해법이 될 터이다.

독자투고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평화적 집회시위에 한해 보장된다.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질 때 보장되는 것이지만 공공의 안녕질서 등이 침해되는 위협한 집회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집회가 증가하면서 집회현장에서 시민들의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관련 우려 여론도 있다. 일부의 변형된 불법 시위, 도는 넘는 과격한 시위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못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의 일상적 피해를 초래하는 것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방침이 최근 변형된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일상적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이지만 현장에서 집회를 보는 경찰과의 마찰이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도로점거, 노숙 불법 집회 등 목과할 수 없는 불법·폭력 집회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집회현장에서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소음 기준치를 초과해 확성기 등을 사용한

경우 엄정한 소음관리로 국민 평온권 보장 등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보호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편 집회참가자들은 자유를 보장받는 만큼 평화적이고 질서있게 진행해 자신들의 항의나 의견을 표출하고 경찰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 결국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에 의해 가능하다.

〈김성표·담양경찰서 공공안녕정보경비계〉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생신고 안된 영유아 2천236명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생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는데, 그 수가 2천236명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대상자 중 학교에 갈 나이임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이유 없이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1명의 보호자가 2명 이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23건을 추려 경찰과 지자체가 생사를 확인하게 됐다. 그랬더니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최소 3건의 사망 사고와 1건의 유기 사례가 발견됐다. A씨의 숨진 두 자녀 외에도 지난해 3월 창원에서 20대 친모 B씨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않아 생후 76일 만에 숨진 여자아도 출생 미신고 영유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여전히 안전이 불분명한 나머지 1천900여명을 복지부 위기아동 조사대상에 포함해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10(가) 101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